"경제 불확실성·회복력 진단 체계 도입을"

제주도, 10일 올해 첫 경제산업정책회의 개최
올해 성장률 1.6% 내외… 생산·소비·투자 부진
내국인 관광객 감소·국내 경기 둔화 따른 여파

올해 도내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제주지역 경제 전반이 지난해보다 부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내국인 관광객 감소와 국내 경기 둔화에 따른 것으로, 제주경제 회복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도 함께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0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올해 첫 경제산업정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를 비롯해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일동 한국은행 제주본부장, 양덕순 제주연구원장, 정귀일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장 등 도내 경제전문가들과 관련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고봉현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주경제 현황 및 2023년 전망'을 주제로 제주경제 산업구조의 변화와 부문별 진단에 이어 올해 경제 전망을 공유했다.

우선 지난해 제주경제 성장률은 전년(1.2%) 대비 2.7%(실질 지역내총생산(GRDP) 기준) 내외로 상승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른 관광객 증가로 관광·서비스업 중심의 회복 흐름과 함께 농림어업, 제조업, 건설업 등 주요 산업 경기가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하면서다.

올해 제주경제 성장률은 1.6% 내외로 전망됐다. 연구진은 "2023년 제주경제는 해외여행 수요 증가 등으로 내국인 관광객 감소가 예상된다"며 "국내경기 둔화로 인한 생산, 소비, 투자, 고용 등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2022년보다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고 연구위원은 이어 제주경제의 불확실성과 회복력을 진단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 연구위원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에서 벗어나는 단계로, 회복력이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어떻게 제주경제의 회복력을 진단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는 부재한 것이 현실"이라며 "실물경제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제주지역 주요 경제주체들의 기대심리 변화와 정량·정성적 모니터링을 통해 제주경제의 회복력을 주기적으로 진단·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지역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지원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도는 향후 경제산업정책회의를 통해 경제산업 분야별 주제를 다룬다. 구체적으로는 ▷농축산업 ▷건설(부동산) ▷관광 ▷고용물가 ▷신성장산업 ▷수산업 ▷기타 소비·금융·물류·서비스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새봄엔 나무 한그루씩 심어보세요" 12일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 들불축제 행사장에서 '새봄 새희망 묘목 나눠주기'가 마련돼 도민들이 묘목을 받아 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노후 공동주택 안전 조사
제주시, 총 772곳 대상 진행

제주시가 사용 승인 후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 분야 실태 조사를 벌인다.

12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실태 조사는 시설물안전법에 의한 것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중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와 4층 이하 660㎡ 초과 연립주택 등 총 772개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실태 조사는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의뢰해 3월부터 6월까지 진행되는데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균열과 손상 상태 등을 들여다본다.

조사 결과 지정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건축물은 제3종 시설물로 지정·고시한다. 고시된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설계도서와 관리대장 등을 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에 등록해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에는 공동주택 747개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제주시에서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된 공동주택은 총 16개소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악취관리 불성실한 양돈장 폐업 유도"

제주도, '악취해결 원년' 선포… 4단계 분류·관리
최하위 단계 컨설팅·근본 개선 유도, 거부 시 페널티

분뇨처리와 악취·탄소배출 등 도내 양돈산업의 사회적 비용에 연간 10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제주도가 올해를 양돈장 악취 해결 원년으로 삼겠다며 악취 없는 양돈산업을 선포하고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한돈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양돈악취 집중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제주도는 "그간 양돈업계는 노후 시설 개선, 악취저감시설 설치 등 농가별로 악취저감에 노력해왔으나, 농가 간 악취관리 수준에 격차가 있는 데다 일부 농가의 안일함이 전체 양돈산업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끼쳐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도내 양돈산업에 매해 1070억 원의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경제적 유발효과는 연간 7923억 원으로 추산됐다. 분뇨처리업을 포함하는 경우 약 8280억 원으로 추산됐다.

이 연구에서 연구진은 제주지역 양돈산업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유발효과의 크기가 상당하다"며 "전면 폐업보다는 이러한 편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관리방안이 요구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이에 제주도는 지역 상생과 양돈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다양한 악취관리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양돈장 악취관리 수준 진단 및 컨설팅'을 통해 전 양돈장을 수준별 4단계로 구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페널티를 부여한다.

악취관리 최하위 단계는 집중 컨설팅을 통해 근원적인 개선을 유도하고, 컨설팅을 거부하거나 악취관리에 불성실한 농가에 대해서는 폐업을 적극 유도해 나간다. 악취관리 최상위 단계 농가에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해제하고 2년간 지도점검을 유예한다. 또 현 사육두수의 30% 이내 증축 허용 등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농가에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또 'ICT 악취관리시스템' 시범 운영으로 악취 측정장비를 농장 내에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농장 스스로 사전 조치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며, 61개소 시범 운영 후 전 농가로 확대하고 한돈협회 이관 등 생산단체에 대한 악취저감 책임과 역할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악취저감 기술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우수사례발표회 개최 등 농가와 신기술 정보공유의 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서귀포 하영올레 강소형 잠재관광지 2연패
국비 1억5000만원 투입 홍보마케팅 벌일 예정

서귀포시의 도심속 올레길 '하영올레'가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에서 주관하는 '2023년 제주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 공모사업에 지난해에 이어 연속 선정됐다. 이에 시는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해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전개와 관광상품 판촉 지원 등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키워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강소형 잠재관광지로 선정된 하영올레는 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와 업무협약식을 갖고 SNS 홍보단 취재 및 홍보, 하영올레 1주년 기념 축제 홍보 등의 이벤트를 전개했다.

하영올레는 서귀포 동지역에 3개의 코스로 구성된 도심속 올레길로 원도심에 흩어져 있는 공원, 특화거리, 전통시장, 자연경관 등의 관광자원을 연결한 총 22.8㎞ 길이의 도보 관광상품이다.

시는 올해 야간걷기코스를 추가로 개설하고 이에 맞춰 야간음식 테마거리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공존하는 야간관광 체험 코스를 조성할 예정이다. 백금탁기자